

# '경기침체' 돌파구가 안 보인다

올 2월에도 경기흐름 지표는 내리막을 걸었다. 생산·소비·투자 등 실물경제 세 요소도 모두 악화됐다. 경기가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실물경제 침체의 골은 깊어져만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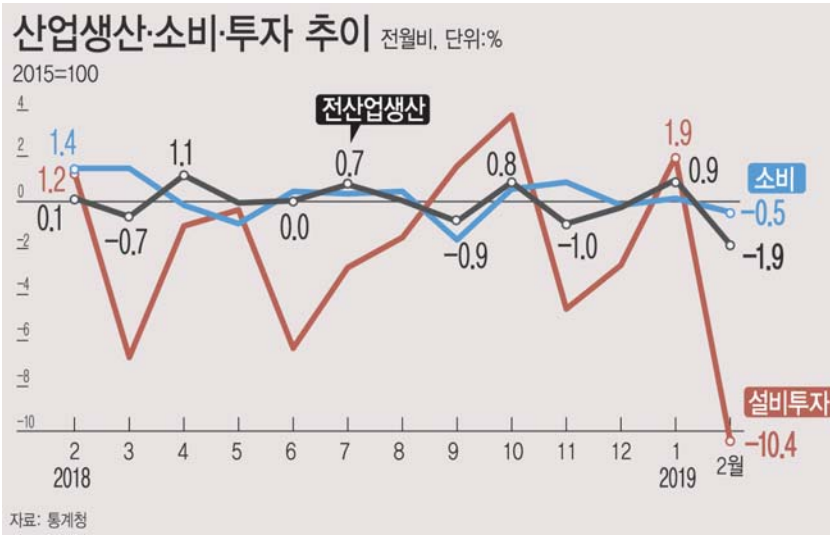
수출 부진 등 단기적인 요인과 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가 맞물려서다. 반도체 등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은 꺼져가고 있고 신성장동력 육성은 아직 먼 얘기다. 정부가 가릴 곳은 '추가경정예산(추경)' 뿐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2019년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4포인트(P),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3P 하락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알리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지표다.

두 지표는 2018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9개월째 동반 하락하고 있다. '지금 당장 경기상황과 미래 전망이 모두 나쁜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두 지표가 9개월째 함께 떨어지는 현상은 통계청이 경기흐름을 짚어보기 시작한 1972년 3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실물경제 지표도 상황이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올 2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9%, 전년보다 1.4% 감소했다. 광공업 감소 폭이 더 컸다. 전월비 2.6%, 전년비 2.7% 줄어 들었다. 서비스업은 전월보다 1.1% 줄었다. 전년 대비로는 보합이었다.

한동안 증가세를 유지하던 소비(소매판매)도 올 2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월보다 0.5%, 전년보다 2.0% 감소했다. 소비 총지수가 전년



### 경기 지표 9개월째 동반 하락...또 최장기 생산·소비·투자 실물경제 '트리플 감소' "정부가 IMF 핑계로 추경 매달리는 이유"

비 감소를 나타낸 것은 2017년 10월 (-0.4%) 이후 16개월 만이다. 소비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을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성장 동력'으로 꼽았던 요인이다.

투자는 나뉘어 더 컸다. 올 2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0.4%, 전년보다 26.9% 줄었다. 건설기성도 4.6%, 10.6%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조업일수 감소'를 내세웠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2월 조업일은 1월보다 5일 적은 19일인데 이는 (지표 악화에) 엄청난 (영향

미치는) 것"이라면서 "이런 큰 요인에 대의 여건이 좋지 않아 지표가 나빠졌다"고 말했다.

조업일수가 적은 월별 특성이 크게 반영됐다는 진단이다. 3월에는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그러나 민간 경제 전문가의 평가는 좀 더 냉정하다. 단기적인 요인에 구조적인 문제가 겹쳤다는 얘기다. 한국이 최근 겪는 수출 부진은 사이클(Cycle·주기)상 단기적인 경기 하락을 부른다. 2017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장기적인 침체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요인이다.

투자 부진 문제도 있다. 최근 몇 년간 설비투자는 책임졌던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의 '호시절'이 끝났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수요 부진으로 수출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단가 하락을 넘어 불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런 상황을 증명하듯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떨어지고 있다(2018년 연간 73.5%→올 1월 73.3%→2월 71.2%).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올해 긴축경영 기조를 확대하겠다는 입장(한국경영자총협회 '2019년 경영전망 조사')이다.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시장팀 연구원은 "구조적인 경기 둔화 흐름과 수출 및 투자 부진이 함께 나타나면서 경기 하강이 가파르고 장기화되는 모습"이라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노동을 투입할 수는 없으니 신성장동력을 찾아 자본을 투입, 성장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 전략"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런 정부의 노력은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인력을 요구한 한 증권사 거시경제 담당 연구원은 "벤처기업 창업환경 조성, 벤처캐피탈(VC) 육성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혁신성장'은 이전 정권의 '창조경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성공 여부는 의문"이라면서 "당장 경기를 부양할 방법은 추경밖에 없다. 정부가 미세먼지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를 핑계로 10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라고 짚었다.



## 때 아닌 '화폐단위변경' 논쟁 "1000원이 1원 된다면?"

있을 만 하면 나오는 리디노미네이션(Redemption: 화폐액 면단위 변경)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 부터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가치를 그대로 두고, 액면가를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원화의 액면단위를 1000대 1로 낮춘다고 하면 10,000원을 10원으로, 1,000원을 1원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이뤄진 것은 1962년 박정희 정권 시절이다. 당시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원'을 거둬내고 있다. 미 달러당 각국의 환율을 비교해보면 원화 단위는 상당히 크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만 보더라도 1달러당 엔화는 110.78엔, 위안화는 6.78위안으로 원화(1137.0원)보다 화폐 단위의 지릿수가 적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신흥국이 아닌데 1달러당 환율이 네 자릿수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지금껏 공론화 과정이 제대로 이뤄진 적은 없다. 워낙 반대 여론이 많았다. 예를 들어 원화의 액면단위를 1000대 1로 낮춘다고 하면 10,000원을 10원으로, 1,000원을 1원으로 바꿀 수 있다. 값이 낮아지는 것으로 헷갈릴 수 있는데 숫자만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화폐 개혁이 이뤄진 것은 1962년 박정희 정권 시절이다. 당시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원'을

거둬내고 있다. 미 달러당 각국의 환율을 비교해보면 원화 단위는 상당히 크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만 보더라도 1달러당 엔화는 110.78엔, 위안화는 6.78위안으로 원화(1137.0원)보다 화폐 단위의 지릿수가 적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신흥국이 아닌데 1달러당 환율이 네 자릿수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지금껏 공론화 과정이 제대로 이뤄진 적은 없다. 워낙 반대 여론이 많았다. 예를 들어 원화의 액면단위를 1000대 1로 낮춘다고 하면 10,000원을 10원으로, 1,000원을 1원으로 바꿀 수 있다. 값이 낮아지는 것으로 헷갈릴 수 있는데 숫자만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화폐 개혁이 이뤄진 것은 1962년 박정희 정권 시절이다. 당시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원'을

리디노미네이션, 경제·금융거래 규모 커지면서 부각  
美 달러당 환율, OECD 중 네 자릿수 유일 국가 '한국'  
아직 '신종문' 우세... "비용 많이 들고 물가에도 압력"

'원'으로 바꾸고 화폐 액면단위를 10대 1로 절하하는 개혁을 실시했다. 이후 57년간 현재의 화폐 단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경제와 금융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액면변경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가령 1조원을 숫자로 표기하려면 '1' 뒤에 '0'을 12개를 붙여야 한다. 숫자 단위가 커 계산과 거래, 회계 처리 등에 불편함이 따를 수 밖에 없다. 특히 편의성 측면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일상 생활에서는 '0'을 빼놓고 쓰는 경우를 볼 때가 종종 있다. 식당이나 커피숍 등에서 메뉴판에 2만원을 '2', 1만5000원을 '15'로 줄여 표기하거나 4500원을 '4.5'로 줄여 표기하기도 한다. 원화의 대외 위상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이

시키지 못했다. 여론도 아직은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다. 화폐 단위를 변경하게 되면 물가가 불안정해지는 등 위험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주체들의 막연한 불안감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소비가 위축되고 실물자산 투자가 늘어 부동산 값이 될 우려도 생긴다. 새로운 화폐를 만들거나 시스템과 프로그램 등을 교체하는 데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점도 부담이 된다.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물가에도 압력을 줄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금 상황이 국민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 고등어·오징어 금어기 시행...어족 자원 보호 '파란불'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고등어'와 '살오징어' 금어기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내달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고등어 금어기는 이달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달간이다. 살오징어 금어기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또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고등어와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된다. 전체 길이 21cm 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오징어의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종모양까지 길이)이 12cm 이하인 살오징어는 잡을 수 없다.

정해진 금어기 기간에 고등어와 살오징어를 잡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령 제6호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등어는 다년생 회유성어종이다. 봄·여름에는 따뜻한 물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해 먹이를 섭취한다. 가을·겨울에는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한다. 산란장은 동중국해의 양쯔강 연안해역과 제주도 동부해역, 대마도 연안해역이다. 산란하는 어미와 어린고등어를 보호하기 위해 산란기인 3~6월에는 조업을 자제해야 한다.

해수부는 고등어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4~6월 중 1개월을 금어기로 설정한다. 고등어의 84.6%를 어획(2018년 기준)하는

대형선망어업은 산란기와 어린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기인 봄철에 휴어를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2개월(4월30일~6월27일)간 휴어기를

시행했다. 올해는 3개월(4월18일~7월20일)로 연장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에 어미고등어와 일명 '총알오징어'라고 하는 어린오징어가 유통되지 않도록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국민들이 자원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남부 Lotto 제 852회차 당첨결과 (2019년 3월 30일 추첨)

11 17 28 30 33 35 + 9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4	4,801,543,407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67	47,776,552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328	1,375,013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14,850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876,933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간: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휴일인 경우 역망일임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